

안전장치 없는 8차로 위험천만 등하굣길

광산구 성심병원 주변 8차선 도로
통학로 이용... 학생들 횡단 필수
하남산단 대형차량 통행 등 위험
“학교 300m 밖... 스쿨존 지정 불가”
유사 사례 평택시는 안전장치 설치

광주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왕복 8차로에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례가 있던 타 지자체의 경우 횡단 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펜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찾은 광주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앞 교차로. 이곳은 너비 35m에 달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하남산단이 인접해 있어 각종 대형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는 경사져 있는 형태로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

문제는 이 8차로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8차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아파트, 한쪽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학교 건너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하교 시 필수로 8차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과속 단속카메라 1대가 전부다. 도로반사경이나



광주 광산구 하남중앙초, 어등초교 등 관내 학생들이 광산구의 한 8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등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방호울타리 등도 전무하다. 이 탓에 학생들은 30초 남짓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의지해 매일 ‘아슬아슬’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건너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성인도 8차로를 30초 안에 건너려면 촉박하게 느껴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달리다시피 해야 겨우 시간 안에 횡단할 수 있다”며 “특히 아침에 화

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불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방지턱 등 최소한의 안전 설비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와 경찰은 해당 도로가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에서 벗어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회의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당시 아파트 입주

자들과 만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했다”며 “권장’ 차원에서 시속 30km 표지판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폭이 넓은 간선도로로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신호등 2개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가 지난해에 준공됐는데, 입주 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 8차선 대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어린이 통행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고원식 횡단보도 등 다른 시설 설치도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 적절치 않다. 육교 등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로 쓰이는 평택시 용죽지구 한 아파트 인접 8차로 역시 차량 흐름 등을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어린이보호 노란색 표지판과 바닥 신호등 등을 설치했다. 속도 30km 제한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설비를 마련한 것이다.

하남 성심병원 교차로 역시 지난 3일 안전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광주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는(ON)’에 올라오고, 21일 기준 공감 52개·댓글 26개 등이 달린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는 30일 동안 공감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에 대해 시민권익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행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ON)에 게재된 제안에 따라 광주시 교통정책과, 광산구 교통지도과·건설과, 광주경찰, 광주시 교육청 등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내용이다”며 “5월 말이나 6월 중 시민권익위원회를 열어 제안자와 관계부서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지역민 100여명 학살... 해남·함평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부역 혐의·좌익활동 가족 등 이유
진화위, 국가에 피해 회복 등 권고

한국전쟁 전후 해남과 함평 등 전남 지역 100여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

화위)는 2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과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을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은 1949년 2월부터 1951년 11월까

지 해남에 거주하던 민간인 54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해남경찰과 관할 지서 소속 경찰로, 희생자 발생 지역만 해남군 해남읍·계곡면·송지면·북일면·황산면·현산면·삼산면·북평면·마산면·화산

면·산이면 등 11곳에 이른다.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의 경우 1949년 4월부터 1951년 2월까지 함평 주민 46명이 부역 혐의나 좌익 활동가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함평 손불면·신광면·대동면·나산면·해보면·월야면 거주민들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함평경찰 및 관할 지서 소속 경찰에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진실규명으로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은 31건(130명), 함평은 100건(115명)이 됐다.

강주비 기자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